

2025년 11월 8일 시행

# 2025년 소방위 승진시험

|      |  |
|------|--|
| 응시번호 |  |
| 성명   |  |

## 【 시험 과목 】

| 편철 순서 | 제 1 과목 | 제 2 과목 | 제 3 과목 |
|-------|--------|--------|--------|
| 과 목 명 | 행정법    | 소방법령Ⅳ  | 소방전술   |

## 응시자 준수 사항

☞ 시험지를 받으면 ‘시험 감독관 또는 방송’의 안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지 표지의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시험을 시작하면 시험지의 ‘편철 순서’, ‘페이지 수량’, ‘인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문제를 푸십시오.  
※ 본 시험지는 모두 18쪽입니다.
3. 시험을 시작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답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운영 요원에게 문제 내용에 관한 질문은 일절 하실 수 없습니다.

☞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 행정법 】

1.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공무원 甲은 2015년 1월 A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하였다.
- A 아파트에는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공무원 甲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시정명령 등의 지도·감독도 하지 않았다.
- 그 후 2015년 2월 A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화재로 A 아파트에 살고 있던 B가 사망하였다.
- B의 유족은 甲이 소속된 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甲에게 직무수행상의 경과실만 인정되어 B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B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② 甲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乙지방자치단체에게 甲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④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이므로, 소방특별조사 당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없다.

2.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가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다.
- ② 법령상 처분의 취소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처분의 ‘철회’에 해당한다.
- ③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 행정법 】

4.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②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③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본다.
- ④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5. 소방공무원 甲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甲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을 하면, 그 해임처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甲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해임처분을 받은 甲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심리 결과 甲에게는 해임이 아닌 파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원징계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甲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

6.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③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만을 다룰 수 있을 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는 다룰 수 없다.

7. 사정판결 및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경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내릴 수 있다.
- ② 「행정심판법」은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취소심판 또는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고 한다.
- ③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④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아닌 피고가 부담한다.

## 【 행정법 】

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히무효이지만, 행정내부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규율의 밀도와 규율영역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은 위헌적인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
- ④ 특정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9.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조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해당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③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중 임기만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무효확인으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10.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 ③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11.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상 즉시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 ③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구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행정법 】

12.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설사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 조세의 과오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지 않아도 과세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1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2012년도와 2013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대학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국가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대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일 뿐, 위 계획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의 성격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권력 행사’로는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관계이익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 행정법 】

14. 행정법관계에서의 계약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확인 또는 이행 청구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ㄷ.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ㄹ.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5.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③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제1차로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계고서를 발송한 경우, 제2차의 계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16.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③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히무효이다.

17.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히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증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ㄷ.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과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 착수된 체납처분은 당연히무효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 행정법 】

18.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 ④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허가처분을 지체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되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③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 ④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에 반한다.

2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 ③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 【 행정법 】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부작위위법확인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ㄴ.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이전의 거절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통지에 불과할 뿐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ㄷ.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 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3.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에 의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또는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의 관점에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보상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상당보상’을 의미한다.
- ②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국가는 그 자발적인 협조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 「행정심판법」의 규정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 )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 )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① | 90일  | 14일 | 180일 | 14일 |
| ② | 90일  | 21일 | 1년   | 14일 |
| ③ | 90일  | 14일 | 180일 | 7일  |
| ④ | 180일 | 21일 | 90일  | 7일  |

25. 행정소송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수임행정청 명의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임행정청을 피고로 본다.
- ② 행정처분이 있는 후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원고 또는 소송보조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이 직권으로 피고를 결정한다.
- ③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이 없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이 A 소방안전본부장에 대하여 해임처분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당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도록 요구조치한 경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소방청장은 위와 같은 조치요구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 【 소방법령Ⅳ 】

1.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고충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청구서 부분(副本)을 송부해야 하고,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청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④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보완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고충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처분 및 통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 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 ②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징계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임용권자와 징계처분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 처분권자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정직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상 총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위원이 된다.
- ②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하고, 그 방법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으로 한다.
- ③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임용시기와 임용시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②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임용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다음 날이다.
- ③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임용일은 사망일의 전날이다.
- ④ 시보임용예정자가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일은 사망일의 전날이다.

## 【 소방법령Ⅳ 】

5.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와 제2차 평정자로 구분하며, 소방서 소속 소방위 이하 계급의 2차 평정자는 소속 소방서장이다.
- ② 근무성적평정점이 45점 이상~55점 미만인 평정점일 경우 분포비율은 40퍼센트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 ③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소방위와 소방장 계급의 기본경력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이고, 초과 경력은 기본경력 전 1년간이다.
- ④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6.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또는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 ②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1회 1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③ 소방공무원은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 휴무일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과 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활동 중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7.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사업·운송용조종사 또는 항공·항공공장정비사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함)

- ① 소방령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 ② 소방경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3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③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 ④ 소방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8. 「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 한다.
- ②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③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 ④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파견근무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 소방법령Ⅳ 】

1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상 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순서 중 두 번째는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이다.
- ②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③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④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 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은 0.5점,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의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1. 「소방공무원 징계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②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
- ③ 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④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12. <보기>는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상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에 해당하는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가.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은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에서 이미 ( ㉠ )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 ㉡ )년 이내에 그 지역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의 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사 정원의 ( ㉢ )분의 1 이내로 한다.
- 나.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은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최근 ( ㉣ )년 이내에 화재감식 또는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 ㉤ )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 다.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 ㉥ )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라.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 ㉦ )년[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 부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와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부문·분야의 소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 ㉧ )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 ㉨ )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① 21
- ② 22
- ③ 23
- ④ 24

## 【소방법령Ⅳ】

13. 「소방공무원 임용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상 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4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혼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시행규칙상 혼재 기준만 고려하며, 제시된 화합물은 모두 위험물로 간주함)

- ① 황화인 100 kg과 아조화합물 100 kg의 혼재
- ② 칼슘의 탄화물 300 kg과 적린 100 kg의 혼재
- ③ 나이트로화합물 100 kg과 알킬알루미늄 10 kg의 혼재
- ④ 금속의 인화물 300 kg과 질산(비중 1.49 이상) 300 kg의 혼재

1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함)와 완공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등에 대해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변경허가 신청과 별도로 가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신청서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 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와 관련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용도폐지 신고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용도폐지신고서와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며, 당해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5일이다.
- ③ 용도폐지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 ④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의무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을 말하며, 여기서 관계인이라 함은 소유자만을 의미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시에 저장 또는 취급의 중요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저장 또는 취급의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③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당해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 ④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 조례의 규제를 받는다.

# 【 소방법령Ⅳ 】

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제조소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등을 말한다.
- ② 소방청장은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수시평가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평가실시일,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이행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점검 또는 현장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 ④ 최초평가는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또는 직전 정기평가 혹은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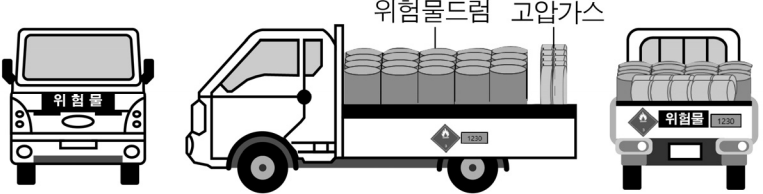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최대 5억리터의 등유를 취급하는 제조소는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자체소방대에 필요한 자체소방대원의 수와 전체 화학소방차 중 포수용액 방사차의 대수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제조소는 상호응원 협정을 맺지 않았으며, 대수와 대원의 수는 규정상 최소 수를 의미함)

|   | 자체소방대원의 수 | 포수용액 방사차의 대수 |
|---|-----------|--------------|
| ① | 10인       | 2대           |
| ② | 15인       | 2대           |
| ③ | 15인       | 3대           |
| ④ | 20인       | 3대           |

[20~21] <보기>는 2025년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에서 한 위험물운반차를 정차시켜 검사한 결과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 해당 위험물운반차 사진



나. 내용적 200 L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0개의 위험물 시험 및 판정 결과: 제4류 위험물

- 1) 인화점 19℃(1기압)
- 2) 액체 판정
- 3) 비수용성 판정

(단, 모든 드럼의 내용물은 동일하며 각각 200 L씩 수납됨)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가 수납된 가스용기 10개

(단, 고압가스가 수납된 가스와 가스용기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해당 위험물의 위험등급과 드럼 1개의 최대 수납량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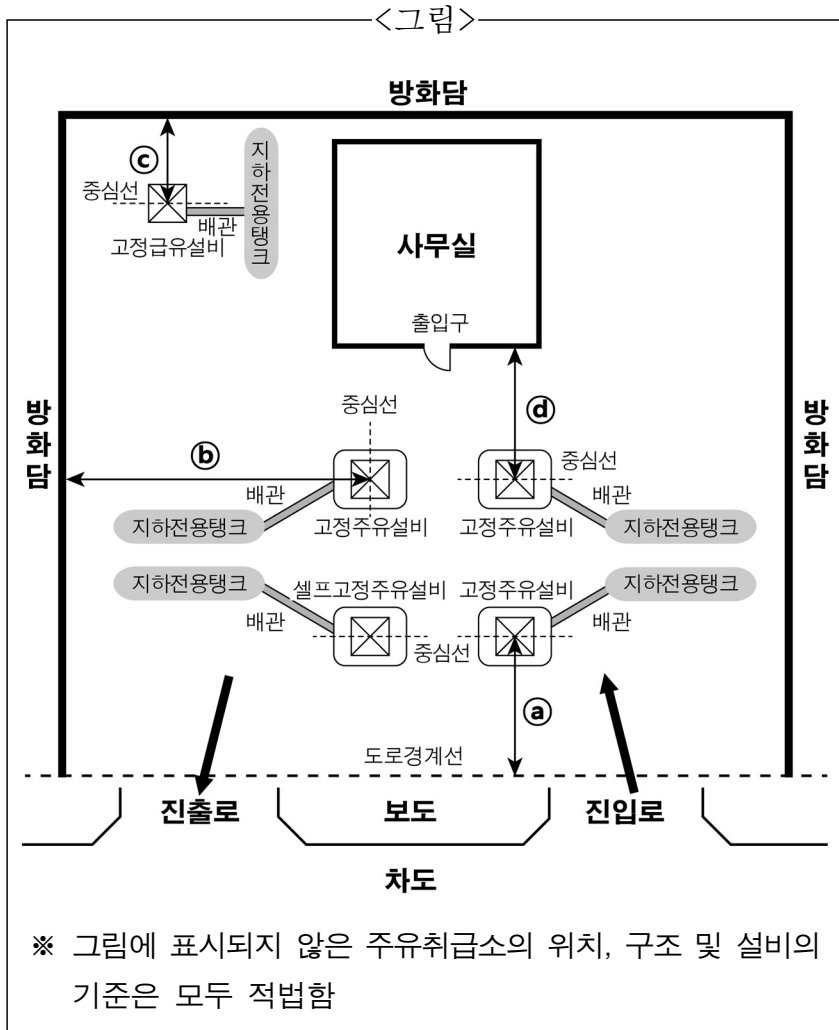
|   | 위험등급 | 최대 수납량(L) |
|---|------|-----------|
| ① | I    | 196       |
| ② | I    | 198       |
| ③ | II   | 196       |
| ④ | II   | 198       |

21. 운전자가 ‘고압가스가 수납된 가스용기’와 ‘위험물을 수납한 드럼’을 같이 운반한 경우, 위반과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승자 없음)

|   | 위반 기준          | 벌칙 기준         |
|---|----------------|---------------|
| ①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② | 위험물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③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④ | 위험물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 소방법령Ⅳ 】

[22~23]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평면 그림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사무실 출입구 외의 개구부는 없음)



22. 해당 주유취급소의 최대 허가수량으로 옳은 것은?  
(단, 고정급유설비, 고정주유설비 및 셀프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된 지하전용탱크 외에는 위험물 없고 사무실 이외의 건축물은 없음)

- ① 100,000 L
- ② 150,000 L
- ③ 200,000 L
- ④ 250,000 L

23. ㉓, ㉔, ㉕와 ㉖의 최소 거리 값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방화담과 벽에는 유리 부착 없음)

- ① 9
- ② 10
- ③ 11
- ④ 12

24. <보기>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허가 현황이다. 해당 일반취급소의 위험물 허가 현황에 따른 소화난이도 등급과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로 옳은 것은? (단, 표에 제시된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의 배수만 적용함)

<보기>

가. 일반취급소(옥내)의 위험물 허가 현황

| 유별  | 품명         | 허가수량(L) |
|-----|------------|---------|
| 제4류 | 제1석유류 비수용성 | 10,000  |
|     | 제2석유류 비수용성 | 50,000  |
|     | 제2석유류 수용성  | 4,000   |

나. 표에 제시된 허가수량 이외의 위험물은 없음  
다.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1호에 해당함

|   | 소화난이도 등급 | 적응성이 있는<br>소화설비 | 경보설비     |
|---|----------|-----------------|----------|
| ① | I        | 포소화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 ② | I        | 물분무소화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 ③ | II       | 포소화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 ④ | II       | 물분무소화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송취급소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입구를 철거하는 경우
- ② 방호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 ③ 옥내소화전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 【 소방전술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구조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② ‘재난관리정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등을 말한다.
-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2. 데이터 센터 화재 대응절차(SOP239)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전 위험, 화재확산 차단 등을 위해 전원 차단이 필요한 경우 건물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 ② 배터리실, 무정전전원장치(UPS)실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소화설비가 작동하여도 화재를 진압하지 못할 수 있다.
- ③ 배터리 자체소화시스템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④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보관·공급하고 무정전 전원장치(UPS)는 전원공급 및 전력 공급의 일시적 감소·차단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설치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 경우의 화재 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3. 화재가 발생한 위치(화점)를 내·외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조설비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공조설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기가 있는 최하층을 확인한다.
- ② 최상층의 창 등으로부터 분출속도가 약한 백색 연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아래층에 화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 ③ 화점에 가까울수록 연기의 농도는 진하고 유동은 크고 빠르다(계단, 덕트 등은 제외). 중성대가 있으면 자세를 낮게 하여 연기의 유동방향을 따라 확인한다.
- ④ 연기가 가득한 경우는 각층 계단실 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하고, 옥탑실 출입구 및 피난층 출입구를 개방한 후 배연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화재 특수현상 중 플래시오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화재가스(가연성 가스, 미연소 가스, 짙은 연기)가 천장 위 공간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태(가연성 혼합기)에서 순간적으로 착화되는 현상이다.
- ② 현상이 발생할 때, 뜨거운 가스층으로부터 발산하는 복사에너지는 일반적으로 20 kW/m<sup>2</sup>를 초과한다. 이러한 복사열은 구획실 내의 가연물에 열분해작용을 일으킨다.
- ③ 현상이 발생된 곳의 평균 온도는 537℃~815℃ 정도이며 이 온도에서 방화복을 착용한 소방관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초를 넘기지 못한다.
- ④ 국부적·연료지배형 화재에서 전면적·환기지배형 화재로 급격히 전이되는 화재상황에서 발생한다.

5. 연기의 이동력과 중성대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하층 개구부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지 않다면 상층 개구부가 개방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출입문 쪽을 배기측으로 판단한다.
- ② 배연을 할 경우에는 중성대 아래쪽에서 배연을 해야 효과적이거나, 이로 인해서 새로운 공기의 유입 증가 현상을 촉발하여 화세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③ 중성대를 상층(위쪽)으로 올리기 위한 배연 개구부 파괴 위치는 지붕의 가장자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그 다음으로 지붕의 중앙 부분, 상층부 개구부 순서이다.
- ④ 상층 개구부를 개방한다면 연소는 확대되지만 발생한 연기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외부로 배출되므로 중성대의 경계선은 올라가고 중성대 하층의 면적이 커져 대원의 시야가 확보된다.

# 【 소방전술 】

6. 인명검색 시 안전행동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문을 개방하여 열과 연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 나.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발화건물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구조대원의 생명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 다. 항상 팀을 지어서 활동해야 하며, 대원 간에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 동료대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모든 대원에게 있음을 명심한다.
- 라. 발화층 상층부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든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호스는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엄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 ㉡ ) 이상인 소방 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 ㉢ )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 ㉣ )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u>㉠</u> | <u>㉡</u> | <u>㉢</u> | <u>㉣</u> |
|---|----------|----------|----------|----------|
| ① | 소방서장     | 3년       | 2년       | 산업기사     |
| ② | 소방서장     | 2년       | 3년       | 기사       |
| ③ | 소방관서장    | 3년       | 3년       | 산업기사     |
| ④ | 소방관서장    | 2년       | 2년       | 기사       |

8.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색, 무취이며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고 공기보다 1.5배 정도 무거운 기체이다.
- ② 탄소의 최종 산화물로 더 이상 연소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질소, 아르곤 등의 불활성 기체와 함께 가스계 소화약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③ 사용 후에 오염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보통 유류화재(B급 화재), 전기화재(C급 화재)에 주로 사용되며 밀폐 상태에서 방출되는 경우는 일반화재(A급 화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④ 상온에서는 기체이지만 압력을 가하면 액화되기 때문에 고압가스 용기에 액화시켜 보관한다. 방출 시 배관 내에서 액상으로 흐르지만 분사 헤드에서는 기화되어 분사되고, 가장 큰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이며 약간의 질식 효과도 있다.

9. 열 발생과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사는 가열된 가스의 운동에 의한 열에너지의 전달 방식이다.
- ② 초기 구획실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열 전달 기전은 대류이다.
- ③ 온도는 열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그 표준은 물의 어는점(섭씨 0도 또는 화씨 32도)과 끓는점(섭씨 100도 또는 화씨 312도)에 근거한다.
- ④ 복사를 통한 에너지의 전달은 물체 내의 증가된 원자의 활동에 기인한다.

10. 인명구조활동 시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출입문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개방하여야 하며, 열기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먼저 열어 보아야 한다.
- 나.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소방차량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화염부분으로 방수할 경우 인위적인 혹은 자연적인 배연구를 절대 차단해서는 안 된다.
- 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열기가 힘들다고 해서 문을 발로 차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조대상자가 대피하기 위해 문 근처에 있는 경우 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라. 문의 정면에 위치해서는 안 되고, 한쪽으로 비껴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 뒤편에 있는 화염과 연소생성물이 머리 위로 지나가도록 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나, 다, 라

# 【 소방전술 】

11. 화재 현장 검색 및 구조활동에 관한 설명 중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가. 가능한 한 화점 가까운 곳에서 검색을 시작해서 진입한 문 쪽으로 되돌아 나가면서 하나 하나 확인한다.  
 나. 건물 내부를 1차 검색(Primary Search)할 때, 먼저 방의 중심부를 검색한 후에 후미진 곳으로 이동한다.  
 다. 화재 현장 검색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와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장소의 문은 닫는다.  
 라. 위험한 현장에서 대원이 고립되어 혼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 소방호스 커플링의 결합부위를 찾아서 암 커플링이 향하는 쪽으로 기어 나간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12. 붕괴사고 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반 또는 견고한 점토의 토질을 굴착면 5m 이상 깊이로 굴착할 때의 굴착면 경사도는 75° 이하로 정해져 있다.
- ② 구조건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활동 시 구조대원이 수색 지역에 우선 진입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건을 투입해야 한다.
- ③ 구조건의 활용범위는 건물 붕괴 시 냄새 추적으로 사람의 위치 파악, 수중 구조(물속에서 흘러나오는 특수한 채취 습득), 산악지역 조난자의 구조 등이 있다.
- ④ 토사붕괴 시 추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이거나 구조대상자의 매몰지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삽이나 곡괭이 등을 활용하지 말고 맨손이나 판자 등을 이용하여 신중히 토사를 제거한다.

13.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절차(SOP310) 중 119구조대 현장대응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상물질 누출 사고 시 10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을 배치한다.
- ②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며 선착 시에는 물질정보 확인을 병행한다.
- ③ 사고 현장 잔여물질에 대한 중화는 산성 물질의 경우 중탄산나트륨, 염기성 물질의 경우 소석회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물질을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액체인 경우 50m, 기체인 경우 100m 이상 이격하여 통제선을 설치하고, 분석능력을 가진 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통제선 밖에서의 활동만 실시한다.

14. 헬기 활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헬기 출동을 요청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착륙 예정지점을 정찰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 ② 헬리포트나 헬리패드나 없는 장소에 착륙해야 하는 경우 수직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지역(지면경사도 8° 이내)을 선정한다.
- ③ 조종사가 헬기를 착륙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착륙지점 주변에 위치한 사물들을 살피는 것이다.
- ④ 헬기활용 구조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중증환자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노인 및 어린이의 순으로 하며, 기내에 수용 가능한 인원의 결정은 운항지휘자가 한다.

15. 수중구조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잠수대원이 수면에서 1분에 20 L의 공기가 필요하다면 수심 15m에서는 50 L의 공기가 필요하다.  
 나. 호흡기는 고압의 공기통에서 나오는 공기를 잠수대원에게 주변의 압력과 같게 조절하여 공급하는 장치이다.  
 다. 부력장비 중 중량벨트는 모든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면이 눈높이에 위치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라. 상승 중에는 부력조절기 내의 공기와 잠수복이 압축되어 부력이 감소하므로 적절한 공기 주입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① 가, 나                                      ② 나, 다
- ③ 가, 나, 다                                      ④ 가,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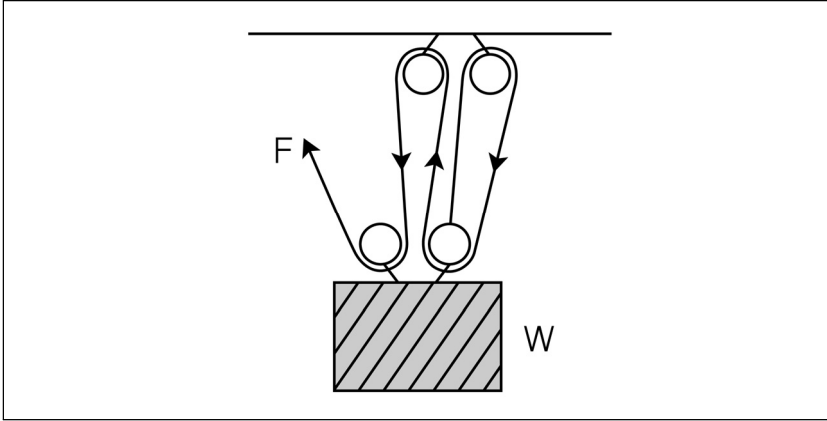
16. 마취총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동물에 대한 마취총 사격은 피하지방이 얇은 쪽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다리의 근육이 많은 부분을 조준하며, 중요 부위에 맞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마취약은 주사기에 약제 주입 후 2~3일이 지나면 효과가 다소 떨어지므로 약제는 현장에서 조제해 쓰는 것이 좋다.  
 다. 마취 효과가 나타나려면 5분 정도가 걸리므로 주사기 명중 후 천천히 따라가 마취 효과가 나타나면 포획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 ③ 나, 다                                      ④ 가, 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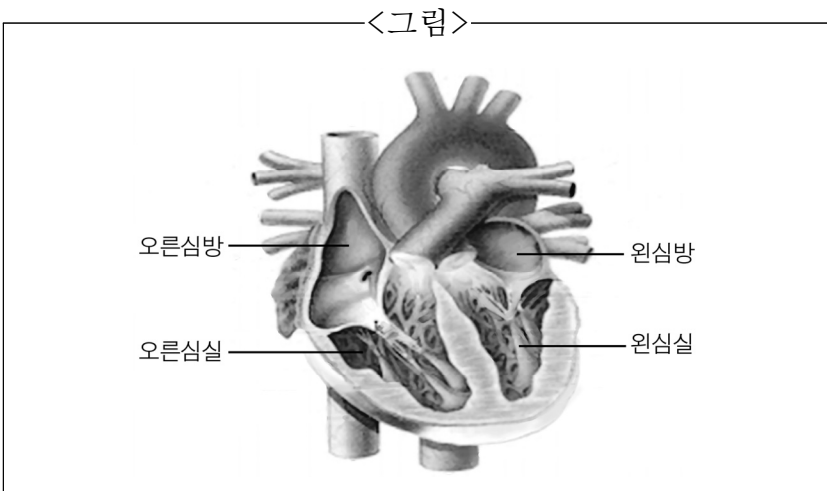
## 【 소방전술 】

17. 그림과 같이 300 kg의 물체를 도르래로 들어 올린다고 가정할 때, 당기는 힘으로 옳은 것은? (단, 장비 자체의 무게 및 마찰력은 무시함)



- ① 100 kg
- ② 75 kg
- ③ 60 kg
- ④ 50 kg

18. <그림>은 심장의 주요 부위와 그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바른 것의 개수로 옳은 것은?



- 가. 왼심방과 왼심실 사이에 삼첨판이 있어 혈액의 역류를 막는다.
- 나. 대동맥의 첫 번째 분지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관상)동맥이다.
- 다. 심장의 근육은 불수의근이며, 정상 심장은 굴심방 결절(SA node)에서 전기자극이 생성된다.
- 라. 오른심방은 위·아래대정맥으로부터 정맥혈을 받아들이고, 오른심실은 산소·이산화탄소 교환을 위해 허파로 혈액을 내보낸다.
- 마. 심장박동조절부위는 심박동수를 조절하며 오른심실에 있는 굴심방결절(SA node)을 통해 심박동이 유지된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19. 뇌졸중 환자에 대한 평가 및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식이 있는 뇌졸중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FAST와 신시네티 병원전 뇌졸중 척도(CPSS) 등이 있다.
- ② 기도를 유지할 수 없는 의식저하 상태라면 기도를 유지하고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며 마비된 쪽을 밑으로 한 옆누움자세로 이송한다.
- ③ 호흡곤란 시 비재호흡마스크로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고, 호흡정지 시 백밸브마스크(BVM)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 ④ 뇌졸중의 징후는 원인불명의 두통 호소, 양쪽 팔·다리의 근력저하나 감각이상 호소, 편마비 된 쪽으로 눈이 돌아간 상태 등 다양하다.

20. 60 kg 성인 남성이 가슴에 검게 탄 화상, 오른팔·오른손 전면(前面)에 수포 화상, 왼손에 가벼운 통증이 동반된 붉은색 화상을 입었을 때, 파크랜드(Parkland) 수액 공식에 따른 첫 1시간 동안의 수액 투여량으로 옳은 것은? (화상 범위: 9의 법칙, 파크랜드 공식:  $4 \text{ ml} \times \text{몸무게 kg} \times 2 \cdot 3 \text{도 화상면적 \%} = 24 \text{시간 수액 투여량}$ )

- ① 202.5 ml
- ② 232.5 ml
- ③ 262.5 ml
- ④ 292.5 ml

21. 머리, 목, 척추의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턱밀어올리기법(하악전인법)의 순서로 옳은 것은?

- 가. 환자 머리말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팔꿈치를 댄다.
- 나. 구급대원의 아래팔을 이용해서 환자 머리를 고정시킨다.
- 다. 귀 아래 하악각 양 옆을 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잡는다.
- 라. 검지로 하악각을 구급대원 쪽으로 잡아당긴다.
- 마. 입이 닫히지 않도록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아랫입술을 구급대원 반대 쪽으로 밀어낸다.

- ① 가-나-다-라-마
- ② 가-다-나-라-마
- ③ 나-가-다-라-마
- ④ 나-가-다-마-라

## 【 소방전술 】

22. 다음과 같은 신생아에 대한 아프가 점수(Apgar score)와 그에 따른 처치의 예로 모두 옳은 것은?

- 몸통은 핑크색, 사지는 청색증
- 심박수는 분당 120회
- 자극에 최소의 반응, 얼굴에 찡그림만 있음
- 제한된 움직임
- 약하고 느린 호흡

| 아프가 점수 | 처치의 예       |
|--------|-------------|
| ① 6점   | 기관내 삽관      |
| ② 6점   | 입과 코의 이물 흡인 |
| ③ 7점   | 호흡 보조       |
| ④ 7점   | 기본적 신생아 관리  |

23. 소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아는 성인에 비해 심장동맥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낮다.
- ② 소아의 건강한 호흡기계와 심혈관계는 성인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 ③ 소아는 성인에 비해 질병에 대한 회복력이 느리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맥박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빠르게 진행된다.
- ④ 소아의 골격계는 골질이 적고 휘어질 가능성이 높아 외부 압력 시 갈비뼈 골절 없이 내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24. 자동식 인공호흡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공호흡 시 99.9% 이상의 고농도 산소 공급이 가능
- ② 공기가 허파에 차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들숨:날숨의 시간 비는 1:3
- ③ 최대 기도압력 60 cmH<sub>2</sub>O 이상 시 경보음과 함께 압력이 외부로 자동 배출
- ④ 배 팽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중이나 상태에 따라 6단계로 산소공급량 조절이 가능

25. 구급활동일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환자의 성별은 문진에 의하고, 구급대원이 판명할 수 없는 경우 의료 기관으로 이송 후 의사의 판단에 의한다.
- 나. 의료지도기관은 의료지도 의사의 소속기관이 아닌 수행 장소를 기록한다.(단,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의사의 의료지도는 제외함)
- 다. 각 항목의 '기타'란은 체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항목도 없어 불가피하게 체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라. 동공반응을 평가한 후 동공의 크기가 4 mm를 초과할 경우 산동에 체크한다.
- 마.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 중 방임에 의한 경우는 '질병 외'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바. 환자접촉 시각은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접촉하기 위하여 구급차에서 내린 시각을 기재한다.

- ① 가, 나, 라
- ② 다, 라, 마
- ③ 가, 나, 라, 마
- ④ 나, 다, 마, 바

수고하셨습니다.